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94
----------	-------

제출년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김진숙, 김재국, 이지화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이진분, 선현우, 유재수
박은정 의원(10인)

1. 주 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증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2025년 2월 기준으로 안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5,7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를 비롯한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미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 지난 2008년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및 이동권,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된 본 인증제도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이 의무 인증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증 의무 이행이 확대되어 인증 취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기관이 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제한적인 인증기관 수와 전문 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증 절차 및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행정적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이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 기관 지정 확대, 인증 절차 간소화, 심사 기준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및 인증 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11개에 불과한 인증기관과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해 인증 절차의 장기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증 절차는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기반으로 승인하는 '예비인증'과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진행되는 '본인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11개 인증기관별로 상이한 업무 처리 규정과 인증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본인증 취득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관련 행정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이용자의 특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BF 인증 제도가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BF 인증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F 인증 기관 지정을 확대하라.

하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라.

하나.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

2025. 6.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